

'부안 지진' 중대본 해제... 피해보상은 어떻게?

주택 전면 파손된 경우 연면적 따라 최대 3600만원

정부가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10일 만에 해제했다.

부안군 지진으로 현재까지 1,200건에 육박하는 시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중대본 해제에 따라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지진 중대본 1단계를 해제하고 지진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1단계는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국내외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동된다.

앞서 행정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지난 12일 오전 8시35분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지진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현재까지 시설피해 총 1196건... 인명피해는 없어

피해 조사·지원 '속도'... 금 2m 가는 등 소파 100만원

순으로 발령된다.

중대본 1단계가 해제되면서 정부의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대본의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편람'에 따르면 자연재난의 피해조사 기간은 공공시설의 경우 '재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사유시설은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재해 종료일은 통상 '중대본 해제일'을 기준으로 한다.

관심은 피해 규모와 지원 내용이다. 이날 오전 5시까지 부안군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피해 신고는 누적 1196건으로 집계됐다. 부안 1014건, 김제 72건, 정읍 27건, 군산 38건 등이다.

시설피해 유형은 주택이 조금 부서지거나 금이 가는 피해가 9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반파 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23건, 농축어업 16건, 기타 185건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 피해는 부안과 정읍에서 각각 6건, 1건 발생했다.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구암리 지석묘군, 개안사 석가여래삼존불상, 내소사 설선당과요사와 정읍 도계서원이 피해를 입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일단 재해 종료가 선언된 만큼 각 지자체는 시설피해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에 나가 재해 대상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고된 피해가 재해 대상에 해당하는 것과 아닌 것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피해조사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이후 재해 대상 기준에 부합하면 복구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주택이 전면 파손된 경우 피해 주택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택이 반파된 경우는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이다.

특히 지진 피해에 한해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가는 정도의 폭 2mm, 길이 2m 이상의 벽체 균열이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틀어져 열리지 않는 경우 등 주택 소파의 경우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액 산정 결과, 금액이 26억원 을 넘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피해액의 7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26억원 이하이면 지자체가 100%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만 피해액 산정과 그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피해 기준에 부합하는 선지급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어 지원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액이 국비 지원 기준인 26억원의 2.5배인 65억원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가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지만, 현재까지는 소규모 피해 위주인 만큼 논의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 주민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별도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호우·지진 등 9가지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농·임업용 시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뉴시스

전북자치도, 실국과장급

부단체장 전보인사 단행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1일자로 실·국·과장급 및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전보인사에서 실·국장급 5명, 과장급 37명, 시군 부단체장은 6명이다. (인사 명단 15면)

실·국장급 전보인사로 정책기획관에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자치행정과장에 김종필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관광국장에 이정석 지역정책과장, 복지여성보건의국장이 황철호 자치행정과장, 인재개발원에 노형수 안전정책과장이 각각 발령됐다.

시군 부단체장 내정자로 먼저 강영석 복지여성보건의국장이 익산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민선5기 정책기획관은 남원 부시장, 김진식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김제 부시장이 된다.

완주 부군수에 문성철 일자리민생경제과장, 장수 부군수에 강경덕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 순창 부군수에 염기남 체육정책과장이 내정됐다.

이에 따라 21일 현재 이순택 남원 부시장은 7월 1일 이후 안전정책과장, 이찬준 김제 부시장이 건설정책과장, 조영식 완주 부군수는 체육정책과장, 송주섭 장수 부군수는 기업애로해소과장, 김영식 순창 부군수는 일자리민생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만호 기자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확대를"

전북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정부, 현행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 대비 1만 9,200명 감소했고,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 상황으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초저출산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현행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30일 단위로 50만원씩 3회, 총 150만원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 급여제도'를 지적했다.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의 경우, 현재 '고용보험 상 예외적으로 지원 조항이 만들어져 예술인은 출산 전후 90일에 대해 하한액 180만원, 상한액

630만원을 노무 제공자는 하한액 240만원, 상한액 630만원의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액은 예술인의 하한액 180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영업을 할 수 없어 당장 생계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직종에 비해 출산급여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임신·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와 그 배우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김동구 의원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현행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책 사각지대 분야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 의장,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이만호 기자

농어촌 통학지원, 중·고교까지 범위 확대

권요안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은(완주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41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 지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권요안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면서 "농어촌 학생의 통학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미래 짊어질 현안 논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사업과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이종섭·임성근 '증언 거부'... "피고발인 신분"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안 상정 회의를 앞두고 돌연 퇴장해 의원들로부터 민측을 사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오후 11시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의결했다.

이시원 전 비서관 등이 현재 공수처 원들은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진행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뒤 하루 만에 연 청문회였다.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병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아 민측을 샀다.

세 사람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이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거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부안군의회 정례회 폐회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지난 21일 제35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김원진 의원은 '부안군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효율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으며,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박태수 의원은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아까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 지금 저의 업무를 다했다"며 퇴장했다. 의원들이 박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위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위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1년의 통상기록 보존기한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1주기 전에 특검 수사팀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호 기자

김광수 의장은 "제9대 전반기 부안군의회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는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후반기 의회에서도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군민들의 권익을 위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정수 도의원, 전기차 배터리

사후 관리·활용 방안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기차 배터리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시 제4선거구)은 '전기차 배터리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간담회'를 지난 20일 도의회에서 사단법인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와 공동 주관했다.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는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된 이후부터 △충전 △정비 △교체 △탈거 △운송 △재제조 △재사용·재활용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각종 서비스를 의미한다.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과 전기차 배터리의 관련성에 주목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사후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사)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 관련 담당자들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의 중요성과 새만금 지역에 '전북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상호토론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 모종골 이끼농장 방문

남원시의회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대표 한명숙 의원)는 지난 15일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종골 이끼농장 현지 답사와 남원시업사이클링 페스티벌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원들은 신촌동 모종골 이끼농장에서 이끼를 활용한 탄소중립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이끼 재배 과정과 이끼의 환경적 효과를 체험하며 녹지 공간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남원시 탄소중립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업사이클링 페스티벌에 참여해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방법을 홍보하고, 다양한 부스에서 업사이클링 활동을 체험하며 지원 순환의 중요성과 재활용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